

남북관계의 경색: 북한의 의도와 한국의 대응

박 형 중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008년 들어 남북관계는 중단되고 점진적으로 악화 과정을 밟아왔는데 그 원인은 전술적이기보다는 구조적 전략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당국과의 관계에서 거래조건과 상호이익의 균형을 재조정하고자 한다(‘상생공영’과 ‘비핵개방3000’). 그러나 북한은 이에 응할 용의가 없으며 과거 거래관계와 이익균형으로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6.15’와 ‘10.4 선언’ 준수).

남북당국간에는 과거에도 관계 중단 사례가 있었다. 2001년 부시 대통령 등장 이후, 2004년 한국으로의 탈북자 대량 송환 이후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개혁적 개방적인 방향(이제강·박봉주 노선: 2001-2005.10)이었고, 한국 측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국정의 중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국관계 재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08년도의 경우는 다르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한국측은 남북관계 재개 그 자체에 연연하지 않으며,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와 발언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다. 북한측은 2005년 말 장성택 복권 이후 내부적으로 수구적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경색을 대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단계적 긴장고조 및 현재와 같은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2008년 초부터 예견되어 왔던 사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한국측이 ‘실수’해줄기를 기다렸다가 그에 대해 의도적으로 과잉대응하는 방식의 대남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008년도 말 남과 북은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긴장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정책 입장을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어느 쪽이든 입장을 먼저 바꾸는 쪽은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또한 양측이 긴장고조 때문에 각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아직 입장을 바꾸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거나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긴장 고조 국면은 2009년도 전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며, 어느 때인가 최고점을 통과할 것이다.

2009년도 전반기 동안 북한은 가능한 한 미국과 고위급 접촉을 성사시킴으로써, 한국정부를 곤궁에 빠지게 만들려고 시도할 수 있다. 남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북 접촉이 활발해지면, 한국 내부에서 ‘통미봉남’에 빠져 한국만 소외된다는 우려와 비판이 높아질 것이다. 한국정부도 미국의 새로운 담당자들과 정책 협의를 강화하게 될 것이며, 한미동맹 강화와 협조를 과시하고자 할 것이다.

한편 한국과 북한은 각각 상대방의 퇴로를 차단하고 몰아세우는 정책은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며 이것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한국과 긴장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순조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한 미국과의 협상만을 통해서서는 경제적으로 크게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

다. 또한 한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과 같은 대규모 경험 사업을 북한이 외교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잠재적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내부 경제문제는 후반기로 갈수록 보다 심각해질 개연성이 크다.

남북한이 상호 전략적으로 타협하지 않으면, 현재의 경색국면은 장기화될 수 있다. 현재의 대치 국면에서 보자면, 남과 북이 정책적으로 타협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경우 남과 북 모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할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한동안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계속되겠지만, 남과 북은 상호 상대방의 체면을 존중하며 명분있는 퇴로를 만들어 주기 위한 모색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대내외 정책을 보다 전향적이고 건설적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북한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현 정책 주도 그룹이 1990년대 이래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2년 7.1 조치 등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발생한 변화의 확장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중앙의 자원과 인원에 대한 장악력의 재강화, 보안 검열기관의 강화, 장마당 세력의 억제와 재편, 남조선 영향력 축소, 체제유지형 외부자원 획득, 내각과 군부에 대한 당기관의 영향력 복원, 장성택 세력의 육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부정책은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부 불만 강화와 경제위축을 초래하고, 이를 대외 긴장조성을 통해 다스리고자하는 충동을 발생시킨다.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이 지속되는 한, 북한이 주변국가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이러한 북한이라면, 주변국과의 상호 위협 감소에 진지하게 나서기 어렵고, 경제원조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건설적이고 승수적으로 활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한국은 북한당국과의 거래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대북정책에서 현 북한당국의 우려와 약점을 적절하게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의 경색은 북한당국의 대내정치 의도에 본의 아니게 협조해 주어버리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게는 명분을 주고, 우리는 실리를 찾는 식의 해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법에서 남북 양측 모두의 체면과 명분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의 비용은 더 크다. 가능한 현실적 해법은 '6.15와 10.4 선언'을 양측이 준수하는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남북간 거래관계가 과거보다는 한 발짝 국제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채우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북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더 넓게 열린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북한당국의 우려와 수요에 대해 배려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